"고향사랑기부제 차별성 있어야"

김성수 도의원, 도정질문서 "차별성 있는 사용처 발굴, 한도액 상향 건의 지역사랑상품권 답례품보다 현물 답례품 비율 높이는 노력도 필요" 주문

고향사랑기부제에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8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각 지자체별로 고향사랑기부금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혜택을 중시하는 소액 기부자들은 답례품을 보고 기부 지자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답례품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타 시·도와의 차별성 있는 사용처 발굴을 통해 기부금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공감한 기부자들이 지속적으로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전북도의 기부금 사용처 발굴 현황과 기부금 한도액 상향건의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 대해 물었다.

또한 소속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자 하는 해외파견제도와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과 함께, 파견 중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 활용을 위해 파견복귀 후 일정 기간 관련 부서에 배치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파견복귀 후 일정 기간 관련 부서에 복무토록 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웃 일본의 이시카와현은 해외파견자의 경우 복귀 후 6년 이상 관련 업무에 복무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를 예로 들며 "도내 전통시장 42%에 해당하는 25개소의 천장 아케이드 지붕 재질이 방음터널 천장 재료와 유사한 재질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며, 안전을 위해 정부는 물론 도내 14개 시군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도내 직업계고등학교의 취업률과 충원율이 낮아짐에 따라 정확한 원인파악과 함께 중장기적 대책을 교육감에게 주문했으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졸업후 지역 정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위해 전북도의 더 많은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답변을 통해 "우선 도내 2월 말 기준 전체 모금액은, 1만1,000여명에 16억원 정도로 1월 말 대비 증가 추세에 있어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북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도 실·국 관련부서, 유관기관 협의 및 도민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사용처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소멸위기 지역 지원, 글로벌 미래인재육성,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등 기부자와 도민이 공감하면서, 작지만 의미가 있고, 감동을 주는 차별성 있는 사용처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를 반영하지 못한 학과 운영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교육의 혁신 부족이 직업계고등학교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해 먼저 전북교육청은 올해 교육부 공모사업인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선정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청-지자체-산업체-대학-유관기관'이 동행, 상행,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전북 직업교육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생명식품산업, 지능형기계부품, 조선해양 등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을 이끌어 갈 맞춤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기업에 취업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라북도 기술 인재의 신성장경로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재훈 기자

"청년창업 지원정책 재구조화를"

김슬지 도의원, 도정질문서 "창업은 늘지만 실패도 많아 창업 관련 실태조사 · 사후관리 · 민간투자 등 미흡"

전북도 청년창업 지원정책이 시대 흐름에 맞춰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전북도의회 제398회 임시회에서 김슬지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의 청년창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슬지 의원은 "지난 5년동안 전북 인구 감소의 93.9%는 18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세대"라면서 "전북의 청년인구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창업은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창업 과정을 통해 본인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추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중의 실업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창업정책은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도의 창업정책은 11개부서 47개 사업, 약 1,681억5,000여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971억6,000여만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창업지원과의 예산 증가가 주를 이루고 10개 부서 중 5개 부서의 사업은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지원과는 지난해 총 20개 사업중에 단 6개 사업만이 청년대상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슬지 의원은 "최근 30세 미만의 청년 창업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증가율이 월등히 높지만, 생존율 역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또한, "전북 창업기업의 경우 3~4년차 생존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청년 창업의 연령별·연차별·업종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북형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사후관리 나아가 민간투자 활성화 등 청년창업 지원 정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특히 청년들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실패를 공유하고 실패에서 배우는 문화, 실패를 비난하지 않는 문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문화"를 바탕으로 전북 청년 창업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김관영 지사의 대안을 물었다.

김관영 도지사는 답변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기존 청년창업정책에 대한 선행평가와 타 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설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내적으로도 도내 청년창업가들이 참여하는 '창업·벤처커뮤니티'를 신속하게 구축할 계획이고 훌륭한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히 연결돼 청년창업가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성공적인 창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커뮤니티와의 연계 등 내실 있는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친윤 대거 입성' 국힘, 새 지도부 출범… 당정대 일체 강화 전망

'당 내선 일방적으로 끌려 다닐 수 있어' 우려도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가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선자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여당 전대, 대통령 관계 최우선 요소 획일화 · 총선 우려도…당직 인선 주목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 친윤(친윤석열)계로 구성됐다. 이준석 지도부가 정권 초기 실각한 뒤 임시체제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친윤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선출된 것이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친정체제를 구축해 '당정대 일체'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 내에선 수직적 당대 관계로 당이 일방적으로 끌려 다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 지도부는 당정협조 강화를 통한 '책임정치 구현'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연금·교육개혁과 가치연대 외교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들에 당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8일 전당대회에서 1차 과반을 달성한 김기현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이룬 최고위원들은 모두 친윤 주류 성향 인사들이다. 비주류 성향 당원들을 대변하며 견제와 균형을 외쳤던 '천아용인' 그룹은 낙선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경선 캠프를 띄울 때부터 대선 끝까지 지근거리에서 수행 대변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태영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을 강하게 지원하고 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으로서 이준석 전 대표와 강하게 각을 세웠다.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지난 지도부에서 이 전 대표를 비판하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러났다. 이들은 전당대회에서도 비대위 전환 과정을 두고 김용태·허은아 후보와 설전을 벌였다.

'윤석열 1호 청년참모'로 정치권에 들어온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선거대책본부에서 청년본부장을 했고, 전당대회는 아예 반(反) 이준석을 내세워 치렀다.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여당 전당대회는 당을 막론하고 대통령과의 협력을 최우선 요소로 지도부가 구성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이 분리된 단일지도체제기 때문에 '계파 대리전'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6년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이정현 대표와 조원진·이장우·강석호·최연혜 최고위원, 유창수 청년최고위원을 선출했다. 비박계 인사는 강석호 최고위원 한 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 2020년·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역시 강한 친문 성향 권리당원 표심이 핵심 요소였다. 비문 내지 비주류 측 인사는 없었다.

이번 전당대회 역시 윤 대통령과의 당정 협조 역량이 사실상 모든 후보들의 모토였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와 '천아용인' 그룹도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분리하는 전략을 썼다. 선수가 아닌 감독이었던 이준석 전 대표만 윤 대통령을 '엄석대'에 비유하는 정도였다.

결국 새 지도부의 최대 강점이자 약점은 당정 일체다. 친윤 주류 그룹은 대선 국면에서 정부 출범 초기에 이르기까지의 당정간 이견 노정이 지지율 저하의 원인이라고 본다. 이 관점에서 새 지도부는 저해 요소가 전혀 없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던 시기처럼 높은 수준의 당정일체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일체를 통한 윤석열 정부 개혁과제 완수를 총선 승리 해법으로 내걸고 선출된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는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내주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인 노동개혁 관련 당정협의를 연달아 열기로 했다.

그러나 당대간 수직적 관계로 당이 대통령실에 끌려 다닐 가능성이 있다. 당의 주체성과 자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당의 핵심 책무 중 하나는 민심에 기반한 행정권력 통제기 때문이다. 2016년 새누리당 지도부와 2020년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 정권을 내준 원인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배타적 성향을 보였던 주류가 당을 완전히 장악할 경우 총선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남은 변수는 당대표의 임명직 인선이다. 김기현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1명과 총선 당무를 총괄할 사무총장·부총장을 임명한다. 4월중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와 협의해 정책위의장도 지명한다.

총선 공천관리위원장과 인재영입위원장도 총선 결과를 좌우할 주요 직위다. 주류 일색으로 짜인 새 지도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핵관 공천' 우려를 받아왔다. 한편 안정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혁신 공천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뉴시스

"농민 체감정책으로 농도 전북 위상 높여야"

윤정훈 도의원, 도정질문서 농가 난방비 등 지원책 마련 주문

현재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원자재 및 금리 인상,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쌀값폭락, 빈번한 기상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농도 전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전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8일 진행된 제398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에 대한 지원정책 및 재난지원금 등을 통한 농가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무주·장수 사과의 가격폭락의 문제, 도내 농산물과 농산물가공식품의 유통구조 다각화 등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윤정훈 의원은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북도의 발 빠른 지원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 생산비가 폭등한 농가 등의 어려움을 살피는 정책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농가들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겨울 한파로 시설농가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1~2월분 면세유 사용량에 대해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윤정훈 의원은 현재 고사 직전의 농업·농촌에 긴급수혈을 위한 방안인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한 지원내역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사업은 단 2건 뿐이었고, 이마저도 모두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북도가 자체 지원한 사업은 없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판매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곡물가격은 하락한 반면, 논벼 생산비 중 특히 수도광역비가 큰폭으로 상승했고 도내 생산비가 타 지역 평균에 비해 높은 현실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어려움에 처한 농촌과 농민들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정책대상자가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정책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윤정훈 의원은 도내 사과 유통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 명품사과라 불리며 주로 백화점에 납품되던 무주 장수사과가 현재 싼값에 판매되고 있고 무주사과, 장수사과 브랜드가 아닌 경상도 사과로 판매되는 양이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현상의 근본 문제는 선별시스템이 지역 내 생산되는 사과량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방안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신원식 국장은 추석 전 출고되는 홍로 품종의 경우 단기간에 홍수출하되는 물량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시설이 부족해 경북지역으로 우리지역의 사과가 출하되고 있다며, 홍수출하에 따른 선별시설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의 표준화 및 하역 기계화 등으로 농산물 물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선별장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정훈 의원은 도내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식품 유통구조 다각화와 관련하여 전북도의 농업 유통은 로컬푸드와 전북생생장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접근성이나 이용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일반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장소인 편의점 등을 활용한 유통망 다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신원식 국장은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은 현재 유통업계의 블루오션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전북도 역시 편의점 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정훈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 비전까지 선포한 전북도의 정책에 우리 농촌의 현실이 반영되고, 정책대상자인 농민이 중심에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중단! 전북금융도시 구체적 계획 제시를"

전주시의원 34명, 서울 이전설 논란 관련 반발 성명 발표 "시대착오적이고 비효율적 발상… 탈전북 꼼수 용납 못해"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연금 이전 검토 지시에 대한 발언에 대해 비난의 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주시의회 소속 의원 34명(전체 35명)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설 논란과 관련해 반발 성명을 발표했다.

8일 전주시의회 신유정 의원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검토 지시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부인했으나, 전북 민심은 허탈을 넘어 격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지역 상황에 기반한 금융도시 설계 등을 해야 할 시기에 수도권으로 재이전하자는 논리는 그 자체만으로 시대착오적이고 비효율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육성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이 서울 만능론에 사로잡혀 스스로 공정과 상식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강조하며 "전주시의회는 기금운용본부 무력화와 탈전북에 대한 어떠한 꼼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윤 정부는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중단하고 대선의 약속이행을 위한 전북금융도시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